

중국 노동정책과 노사관계의 최근 경향: 13차 5개년 계획 이후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0년대 중반 이래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가 뉴노멀(The New Normal)이라는 새로운 정상상태에 들어섰다고 선언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 경제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1980년대에는 9.8%, 1990년대에는 10.0%, 2000년대에는 10.3%, 2010년과 2011년 각각 10.6%, 9.5%에서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평균 7.4%로 내려앉았다. 30년을 넘게 매년 평균 10%를 웃도는 고속성장 시기를 마치고 이제 6~7%대의 중속 성장시대로 들어선 것이다. 그동안 중국 경제가 언제까지 고속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중국은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와 매우 느린 성장에도 불구하고 투자촉진 등으로 내수를 진작시켜서 빠른 성장의 동력을 유지해 오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왔다.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에 따라 대량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빠른 성장, 중국의 국력 신장, 중국 국민들의 빠른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눈부신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미국과 유럽 시장에 대한 수출이 저조한 상태에서 내수성장을 중심으로 고속성장을 지속할 수는 없었다. 중국 경제의 내수촉진, 투자촉진을 통한 성장전략은 기업 부채 누적, 지방정부의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부채 누적, 기업들의 과잉투자에 따른 설비과잉과 부채 누적, 투기심리에 따른 주택과 토지의 버블, 빈부격차의 확대 등 수많은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다. 더구나 중국에서 젊은 노동력이 많던 시대에 누렸던 인구보너스(젊은 노동력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현상은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

서 사라지게 되었다. 도시 노동자들, 특히 농민공들의 비교적 높은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주택가격, 생활비 등의 높은 물가인상 때문에 노동자들의 생활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빈부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은 커지고 있었다.

2010년대 초부터 중국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비교적 빠르게 오른 임금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 경제의 고성장에 의존해 왔던 기업들이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과잉 설비, 부채 등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하거나 혹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인건비 상승으로 해외로 제조설비를 이전하거나 이익을 내지 못해서 체불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노동쟁의가 줄을 잇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속성장 시기에 빠르게 늘어났던 일자리는 성장률이 낮아지고 공장의 해외이전이 늘어나면서 그 수가 줄어들고 오히려 실직자가 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중국 정부는 제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노동정책에서 전환을 맞고 있다.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변화, 특히 일자리 창출력의 저하를 의식하여 중국 정부는 노동법의 규제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 공회개혁, 자율적 노동운동의 불용 등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다. 중국 정부가 2010년대 초까지 취해 왔던 노동시장의 규제강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로부터 점차 노동시장의 규제완화, 보호완화로 돌아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의 저하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들의 도산에 따른 체불, 각종 노동자들의 권리침해, 노동자들의 높아진 권리의식에 따라 보다 자주 발생할 노동쟁의를 의식하여 다음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 하나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협조적이고 고분고분한 중국의 공식노조인 공회에 대한 개혁조치를 통해 기층 노동자의 공회불신을 줄이면서 나태하거나 기본 역할도 못하는 공회로 하여금 기층 노동자들과 소통하면서도 중국 정부의 정책에 협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중국 정부의 통제와 공회의 영향을 벗어나 '자주적인 노동운동'의 태동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노동NGO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특히 외국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온 노동NGO나 공회의 영향을 벗어나 파업이나 파업이 아닌 단체행동을 해온 기층 노동운동과 연계되어 온 노동NGO의 활동가들을 구금하거나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운수업을 중심으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파업이나 노동자들의 항의가 1,454건이나 될 정도로 크게 늘었다(China Labor Bulletin, 2016).¹⁾

이번 호 기획특집에 실린 중국 노동 관련 글들은 지난 2016년 6월 2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국제컨퍼런스 “변화하는 중국의 고용관계”에서 발표된 발제문이다. 쿵상홍 선생의 글은 중국의 노사관계의 시험장(test bed)이라고 할 수 있는 광둥성이 갖는 중국의 개혁 개방에 서의 지리적 위치와 특성, 광둥성에서의 새로운 노사관계 실험 및 중국의 미래지향적인 여러 노동정책, 그리고 공회 개혁 등을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소개하고 있다. 차오젠 교수의 글은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고령화가 진행되며, 임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발표된 중국의 제13차 5개년 계획과 그에 따른 중국 정부의 규제완화적 노동정책이 변화하는 내용을 잘 소개하고 있다. 왕칸 교수의 글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와 노사관계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KLI**

1) China Labor Bulletin(2016.7.7), “Strikes continue unabated in China during first half of the year”, <http://www.clb.org.hk/content/strikes-continue-unabated-china-during-first-half-year>